

2. 세계기후회의와 기업의 과제

○ (會議의 主要 內容)

- 금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베를린에서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됨
- 당사국간 이해 차이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규제일정 합의에는 실패
- 타협안으로 199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,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이전키로 합의함

○ (今回 未解決 事項)

- 공동이행 제도의 인정 여부: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선후진국 공동투자사업의 이행실적을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제도
- 선발개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부여 문제
-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% 감축하는 문제

○ (經濟 및 産業에 미치는 影響)

- 1997년 OECD에 가입하고 기후변화기본협약 의무국가군으로 분류될 경우 2000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됨
- 이에따라 2년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, 비철금속, 석유화학산업과, 에너지 이용기기 업종인 전기·전자, 자동차, 기계제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임

○ (企業의 對應)

- 정부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原單位 10% 감축방침과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 추진, 무역상대국의 에너지효율기준 등 일방적 무역조치에 대응 필요
- 에너지 절약 설비, 에너지절약 공정으로의 투자 촉진,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의 개발 등이 요청됨. 풍력, 태양열 이용 등 신에너지 개발연구 시도

○ (會議 背景)

-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시 기후변화기본협약이 체결되어 1994년 3월 21일부터 발효. 이 협약에 의하여 OECD 및 동구권 36개 선진국은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보고토록 되었음
- 그러나 의무국가들의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을 보면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, 스위스, 네델란드, 덴마크, 체코 등 5개국(독일은 2005년까지 5% 감축)뿐임. 그외에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 대다수 국가는 1990년 수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서 제출

○ (會議의 主要 內容)

- 세계기후회의(공식명칭: 기후변화기본협약 제1차 당사국 총회)가 금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나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당한 차이로 협상 난항.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경제개발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입장. 이해관계국을 4개 국가군으로 분류
 - 美國, EU, 日本, 濠洲: 선진국만의 이산화탄소 규제로는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선발개도국의 추가적인 동참을 강력히 요구
 - 先發開途國: 선진국의 의무 불이행 지적, 의무국가 확대를 우려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의정서 협상의 조기 타결을 반대
 - 産油國: 원유의 판매 감소 우려로 의정서 협상 개시 반대
 - 群小島嶼國家群: 해면상승으로 인한 자국의 홍수 피해 등 이유를 들어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%까지 감축 요구
- 타협안으로 199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이 담기는 의정서 서명 및 법적기구 마련 등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키로하고,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이전키로 합의함

○ (今回 未解決 事項)

- 공동이행 제도의 인정 여부: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선후진국 공동투자사업 (예: 대규모 조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방지시설 설치 등)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제도
- 한국, 중국 등 선발개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부여 문제
-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% 감축하는 문제

○ (經濟 및 産業에 미치는 影響)

-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한 우리나라에게는 2년간의 시간을 번셈이나, 1997년에 OECD 가입으로 기후변화기본협약 의무국가군에 포함될 경우, 2000년까지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됨
- 이에 따라 2년후에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, 비철금속, 석유화학산업과 에너지 이용 기기 업종인 전기·전자, 자동차, 기계제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

○ (企業의 對應)

- 정부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원단위 10% 감축방침, 에너지수요관리,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 추진과 무역상대국의 에너지효율기준 등 일방적 무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 필요
- 에너지절약 설비 및 에너지절약 생산공정으로의 투자 촉진,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의 개발 등이 요청됨. 풍력 및 태양열 이용 등 신에너지 개발연구에 민간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할 것임 (최 주 섭)